

□ 인터뷰-도정일(영문)교수



문화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적 차원에서 문화정책은 한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목표, 이념,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려는 모든 공공 정책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 문화의 확립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해방 이후 50년간 우리에게 문화정책이라 부를 만한 비전과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여기서 문화정책의 필요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문화와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력

의 인식전환이다. 또한 사회발전 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은 민주주의 문화의 확립이라는 기초에 입각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과제들과 연결지어 그 목표가 정의되어야 한다.

김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창작과 표현의 자유 정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화정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나 국민 모두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사실 우리 전통사회의 통념, 관습, 도덕관 등이 알게 모르게 창작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실정법 관행도 많았

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상력이 사람을 움직이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들의 상상력을 구속한다면 문화는 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 '21세기는 경제와 문화의 시대이다. 앞으로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교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50년동안 정치권력의 인식체계 속에서 문화는 거의 언제나 불요불급한 장식적 활동 부문 정도로만 간주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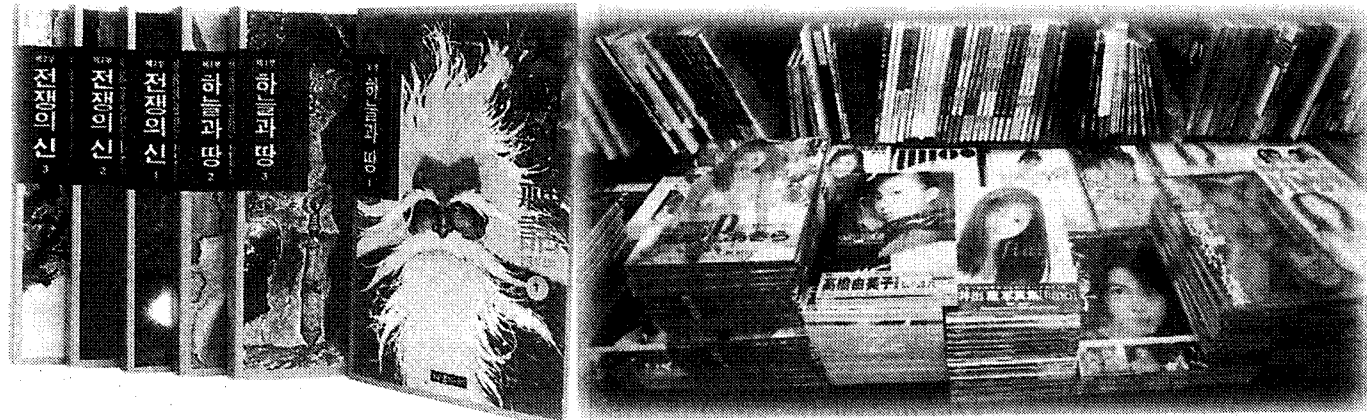
다. 그러나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공약과 관련해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 지금까지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들을 바꾸어 나가면서 문화의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야 하겠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문화산업의 잠재력, 수익성, 광대한 시장 등의 산업적·경제적 이해관계에만 눈 돌릴 뿐 이 산업영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간과하고 있다. 맹목적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문화산업 후발국이 수행해야 할 작업은 문화산업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잠재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다.

〈김동혁기자〉

□ 새정부 문화정책에 대하여 - (1) 창작과 표현의 자유

21세기를 전망하는 수식어로 우리는 흔히 '정보화 시대', '문화의 시대'라는 말을 한다. 문화란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토대로 꽃피우는 분야이다. '문화의 시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러나 현 시대의 문화정책은 전통적인 유교적 사고방식과 서구의 합리주의적 가치관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사실 문화적 향상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꾸준한 관심과 바람직한 방향 정립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신문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이민주)', '영상매체산업(다음주)'을 시리즈로 다루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노골적 성행위를 묘사하는 외국서적. 하지만 작가가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 왼쪽은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레드헌트 불패의 신화를 새 정부에 기대한다

조 한 기

〈민예총 문화정책 연구소 사무국장〉

종 리인준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국대결로 김대중 정부의 국정은 시작부터 공백이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지나친 상상력의 발동일까?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그렇게 쉽게 폄하할 수는 없지만, 21세기와 통일을 준비할 김대중 정부의 막중한 역할은 '준비된 대통령'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의 몫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분명한 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부문 공약은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들을 적잖이 포함하고 있다.

문화체육부를 '문화부'로 독립시키고, 문화부문 예산을 정부예산의 1%까지 확대하며, 검열제도를 완전철폐하고, 성인전용 영화관을 설치하며,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다. 공약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특별히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 이후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제시된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문화예술

인들에게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하게 여겨진 사항은 '검열제도 철폐'와 '문화산업 육성'이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가기관에 의한 예술작품 검열은 작가들을 짓누르는 거대한 억압기제였다. 작품의 소재와 주제를 제한하고 표현 방식을 제한했으며, 자연스레 작가들의 상상력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는 작가들에게는 어김없이 인신구속이나 법적 제재가 뒤따랐다.

1997년의 사례만 살펴볼더라도 소설가 장정일씨가 법정 구속되었고, 만화가 이현세가 '천국의 신화'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인디영화제가 무산되었고,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상영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가 구속되었다. 이 화려하기까지한 무더기 검열과 구속 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은 1997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한 전세계적 해빙 무드 속에서 국가 기구에 의한 이런 야만적인 사례들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97년의 사례들은 예술작품의 이적성, 음란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적으로 문제시된 것인데, 표현자유와 검열의 문제가 단순히 이념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 생활의 은밀한 전 부면, 일상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개인 사생활의 전영역을 국가기관의 통제

아래 두려한다는 끔찍한 연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의 1백대 과제는 이 표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새정부 1백대 과제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애초의 검열제도 철폐라는 공약에서 훨씬 후퇴한 내용이다. 또한 작년의 사례만을 놓고 보아도, 예술작품에 대한 검열은 단순히 심의와 관련된 법적 장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재단법인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아직 그 실천의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몇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역시 좋은 점수를 줄 수 가 없다. 우선 문화부문 예산을 점진적으로 국가 예산의 1%까지 확충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IMF의 철폐를 맞아서 12.9%, 4.491억원이 깎였다. 경주문화엑스포가 100억 중 50억, 부산국제영화제가 10억 중 3억, 문화재 보수 예산 67억원 삭감 등이 그 내용들이다. 또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21세기 문화산업 육성, 문화정책의 핵심은 방송, 미디어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 미디어의 문화적 내용에 대한 국가정책이 없으면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문화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도 가당치않다.

흔히 예를 드는 유라기 공원의 성공은 단지 기술적인 성공이 아니다. 영화 한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반 주변 장치의 공고한 발전없이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요체는 문화예술의 저변을 충분히 육성해야만 한 세기를 빛낼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문화예술의 저변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IMF 이후 국가의 예산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문화 예산이 일순위로 삭감되고 있는 이 황폐한 문화예술의 현실 속에서, 이제 막 출범한 새정부의 문화정책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문화정책이 경제 논리와 정치논리에 종속되어 있다는 혐의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가 인간 발전과 사회발전의 밑거름이며 원동력이란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한 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백성들의 삶의 질 고양이란 과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새정부가 창조적이며 장기적인 문화발전 전략을 하루 빨리 제시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의 문화정책

또한 여전히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종속되어 있다는 혐의를 지을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 등 주변 법률이 동시에 정비 내지는 개폐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비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지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심의, 검열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등 예술 작품 창작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관련법들이 동시에 정비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일단 공보처를 문화관광부로 흡수하기로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방송, 영상에 관한 정책부서를 어디에 둘 것인지 아무런 안이 나와있지 않다. 21세기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등의 산업은 방송, 영상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방송은 주변 매체들을 통합하면서 대중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곧바로 다른 문화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쩌면

— 문화단신 —

MDOP orchestra 정기연주회

30여명의 관현악단으로 이루어진 MDOP orchestra의 정기공연이 오는 6일 크라운관에서 열린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드보르작의 교향곡8번,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엘가의 위풍당당한 행진곡 11번이 연주될 예정이며 우리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연극, '사랑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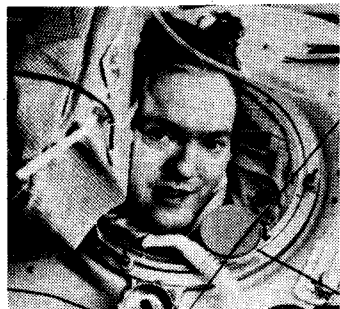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가 오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극장 오늘에서 공연된다.

극단 오늘이 제작한 이번 공연은 다섯쌍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현대 도시인의 일상적인 삶과 가치관을 음미버스 형식으로 전개한다. 문의는 747-2090이다.

제2회 서울국제영화제

'제2회 서울국제독립영화제'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시네코아와 코아이트홀에서 열린다.

서울국제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60분 이내의 국내외 중·단편 영화 29편 등 공식 상영작과 일본 뉴웨이브독립영화, 유현목 감독 대표작을 포함한 특별 상영작 등을 선보이게 된다. 더불어 최근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독립영화작가들을 초청



하여 일본 독립영화의 제작 현황과 배경 등에 관한 '한일 독립영화 심포지엄(가칭)'도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소개될 단편 영화들은 실험성과 사회비판성, 작가의 개성이 물씬 풍기는 영화들로서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개막초청작으로 최양일 감독의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폐막초청작으로 홍상수감독의 '강원도의 힘'이 상영된다. 문의는 3442-0001이다.

연극, '명태 이바구'

극단 세미 창단 10주년 공연 및 제 50회 정기 공연 작품인 '명태 이바구'가 오는 3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오는 7일까지 진행될 이번 공연은 사회구조 속에서 이탈한 인간의 좌절보다는 자신의 구심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지하고도 순수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문의는 766-1722이다.

대학별곡 제 1계명 출판권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

‘始終如一’

시작과 끝이 한결같다.

새로운 화기의 시작입니다.
저마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목표와 과정을 하나하나를 세심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출발이 원대한 사람은 많으나
이룬 것이 원대한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꿈꾸고 시작하십시오.
단, 처음과 끝이 한결같게, 서두르지 않되 쉬지도 말고,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점진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